

#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78.3%

### 지난주보다 9%p 수직상승... 남북 정상회담이 큰 영향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4.9%로 가장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8.3%를 기록했다. 취임 후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비핵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이틀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5월1주차 주중 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 3.1%p·응답률 6.2%)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78.3%가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부정평가는 15.5%(매우 잘못 8.1%·잘못하는 편 7.4%)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2%로 집계됐다.

국정지지도 78.3%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첫 2주 동안 기록한 최고지지도(84.1%, 78.9%)에 이은 역대 3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취임 초 새 정부 기

대효과가 사라진 상황에서 기록한 사실상 최고 수치라 할 수 있다.

지난주 같은 조사(4월4주차 주중집계)와 비교해서도 9%p 수직 상승했다. 3일전 이뤄진 4월4주차 주간집계(70%)와 비교해도 8.3%p가 뛰어올랐다.

리얼미터는 "남북 정상회담이 국민 대부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판문점 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21.0%p·83.3%)과 대구·경북(↑16.7%p·68.3%)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경기·인천(↑8.8%p·83.6%), 부산·

경남·울산(↑5.3%p·72.2%), 서울(↑4.2%p·74.5%)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급등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0.1%p·66.7%)과 40대(↑9.5%p·87.7%), 20대(↑8.2%p·85.4%), 50대(↑7.4%p·73.6%), 30대(↑5.3%p·82.2%)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54.9%로 50%대 중반으로 반등했다. 자유한국당(17.9%)·바른미래당(6.0%)·정의당(5.2%)·민주평화당(3.2%) 순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시



“회의를 주재합니다” 임중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김종희 의원, 학교급식 GMO 식재료 퇴출 법개정 추진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미비점 보완

GMO(유전자변형물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희 의원(김제·부안, 민주평화당)이 학교급식의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길을 열고 있다.

3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유전자변형물질)와 저품질 식자재를 퇴출하고 식재료 납품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골자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 심의 사항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선정 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GMO(유전자변형물질), 저품질 식자재를 퇴출시키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각 학교마다 설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심의를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에 관한 제도 및 관리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GMO(유전자변형물질) 논란의 핵심은 ‘과연 안전한가’가 본질이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각 학교의 운영 노력에 맡긴다는 것은 분명 실천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학교급식에 GMO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밝혀진 사례가 없고,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부당거래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식재료 선정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임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김진성 기자

## 손학규, 바미당 선대위원장 수락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이 3일 6·13 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중앙선대위원장과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공식 수락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 및 안 후보 미래캠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자신이 선대위원장으로 지원해야 할 안 후보에 대한 쓴소리도 가감 없이 내놨다.

손 전 고문은 “많은 사람들이(선대위원장직 수락을) 반대했다”며 “특히 제가 한동안 살았던 호남 지방의 여론은 심각했다. 수도권 지역의 호남인들도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운을 폈다. /뉴스시

### “한반도 평화, 남북간 신뢰가 전제돼야”

**도의회, 김창희 교수 특강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 ‘남북간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3일 의원 총회의실에서 김창희 전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를 강사로 초청해 4.27 남북정상회담 기념 특강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모두 상호 신뢰 없이 평화과정으로 진입할 수 없고, 또한 평화과정으로 진입 없이 신뢰를 구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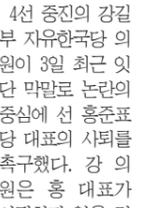
이어 “남북문제는 상호간에 역시 사지의 정신으로 풀어나가고 주변 국가와 연관된 문제는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회담은 1, 2차 때와 달리 회담장소가 남측 판문점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그리고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나온 종전 문제와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민족할 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 역시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며 “그 결과는 평양에서 개최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막말 흥준표 물러나야”

###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 “사퇴 안하면 중대결심” 울주군수 공천 반발 때문? “경선 수용, 별개문제”



4선 중진의 강길부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최근 잇단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선 흥준표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흥 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사실상 ‘탈당’을 예고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의 품격 없는 막말에 공당(公黨)이 날뛴듯 요동치는 ‘괴벨스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한국당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는 공천 과정에서 당 대표의 막말로 인해 상처받은 후보가 있다”며 “당 대표가 지방선거에 지원 유세를 올리고 걱정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당 대표가 보여준 언행은 실망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며 “오죽하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가 흥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려 반성을 촉구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일은 못했다고 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으로 당의 위상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강 의원은 흥 대표를 향해 “당 대표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Tel. 02-6323-3000)